

‘택시요금 인상’ 첫 출근 곳곳 마찰

서울 택시요금 16일부터 800원 인상 승객 “내릴 때 종이 보여줘...이해 안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필요” 택시기사 “승객들요금 속인다고 불만”

지난 16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올랐지만 아직 새 미터기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아 승객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카카오 카풀 논란 이후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요금이 오르자 시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 조건표를 일일이 확인한 뒤 미터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서울역과 노원역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난 승객들은 대체로 택시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 불만을 털어냈다.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하법석(39)씨는 “택시 요금 인상을 알지 못했다”며 “일반 식당의 경우도 가격이 오르면 써 붙여놓는데, 타기 전에 요금 올랐다는 안내도 없

고 내릴 때 종이 보여주면서 올랐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어려운거 이해하지만 (요금을 올리려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모(21)씨는 “계산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었지만 미터기가 아닌 종이에 근거해서 가격을 올려서 믿음이 가지는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요금 오를 때마다 반복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불만을 터뜨리는 일부 승객 탓에 골치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택시기사 김부영(76)씨는 “요금이 오른 것을 아는 승객은 괜찮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하기도 전에 카드를 대 버린다”면서 “그럼 바로 결제가 돼버려서 차액을 더 내야한다고 하면 화를 낸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럴 때마다 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된 16일 오후 서울 한 개인택시에 종전 미터기 요금에 추가 금액을 알려주는 요금 조건표가 놓여져 있다. 승객들은 미터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차량 내부에 부착된 요금 조건표에 따라 추가금액을 합산해 지불하면 된다.

건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지만, 요금을 더 받는 것 아니냐는 승객도 있었다. 그러면 미터기를 껐다가 켜서 처음부터 전부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락훈(67)씨는 “문제는 외국인 승객을 태울 때”라면서 “어제는 롯데호텔에서 신라면세점으로 가는 중국인을 태웠는데, 말이 안 통해서 호텔 직원을 불러서 금액을 올랐다고 통역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개인·법인택시 7만2000대에 대해 요금 계측기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요금계측기 제작·수리업체 60여개가 현장에서 요금 계측기를 뽑아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을 수정한 뒤 다시 부착하는 방식이다. 2009년과 2013년 요금 인상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뉴스

서울시, 시민과 함께 2만2천개 시설물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시민·전문가 참여해 합동점검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18일~4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2만 2000여개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올해는 공영장 숙박업소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지난해엔 시설물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투입, 점검 장비 사용 등 확인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위험요인 유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도 점검자, 점검분야,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행제’를 도입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사용자)가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분야별 안전관련 정보를 표기해 별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올려 올해 안전진단 과정에서 지역사장에 밝은 시민이 스스로 안전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약 1100명) ▲지출방재단(약 6700명) ▲더 안전시민도입(약 2300명) 등 안전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 회원 1만여명이 참여해 각 지역별 안전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도 확대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u.seoul.go.kr>),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우수 사례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총 200건(우수 10건, 장려 190건)을 선정해 포상금(우수 20만원, 장려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통 장 담그기 배워요... ‘서울장독대’ 20개구로 확대



서울시가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올해 20개구로 확대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장 전도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각 자치구는 시민 대상 교육으로 서울장독대를 확산한다.

시는 장 담그는 전통 식문화를 복원하고 건강한 우리 입맛을 되찾

기 위해 2017년부터 영양사, 식생활강사 등 식생활 교육 전문가와 시민 대상 장 담그기 교육 ‘장(醬)하다 내 인생’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전통장 담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20개자치구로 교육을 대폭 확대, 시민들이 전통 장과 간장을 직접 담그보는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사업을 추진한다.

각 자치구는 된장항아리 15개, 간장항아리 15개씩 ‘서울장독대’를 설치한다. 이후 지역주민 4인이 1조가

돼 전통장을 직접 담그며 ▲2~3월 장 담그기 ▲4월 장 가르기 ▲10~11월 장 나누기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다. 3회 교육(장 담그기, 장 가르기, 장 나누기) 참여자는 장이 숙성된 후 된장 3kg, 간장 500ml를 가져갈 수 있다. 시는 또 19일부터 서울혁신파크 맞닿에서 식생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9 장하다 내 인생’ 교육을 실시한다. 또 전통장 담그기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장 담그기 매뉴얼을 구축, 배포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건강한 입맛을 지키기 위해 1가구 1장독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장독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학생들, 하루동안 서울 시청 공무원 체험해보자

서울시는 다음달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학생을 위한 ‘하루동안 서울시청 공무원체험’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청사 관람 행사와 연계해 시의 핵심조직, 업무내용, 해결과제 부여 등 체험활동을 마련했다. 학생에게 서울시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부터는 현장수업과 교육실수업에서 쓰이는 교재를 새로 제작했다. 시는 또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용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맞춤형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중학교교과면 연중 제한없이 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체험학습 신청 누리집 ‘꿈길’(www.ggom.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중 총무과(02-2133-5633, carpe_diem@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내달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 승인 최장 ‘4일→1일’ 단축돼

내달부터 판교 기업지원허브 입주 스타트업들은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과 이같은 내용의 드론 비행허브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판교 기업지원허브의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센터 인근에서 드론을 시험비행 하기에 앞서 승인을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3~4일)을 대폭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센터 주변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시내에서 시험을 진행했지만 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에



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공군측이 미리 성남시에 통보한 일정에 맞춰 비행을 신청하면 센터 인근의 코이카 운동장 부지 등에서 드론 시험비행을 바로 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따라 ▲센터 인근에서 넓은 공역을 활용돼 여러 난이도의 시험을 하고 ▲연구개발 성과도 즉각 시험하는 등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